

전남지역 저소득층 자립 지원 힘 모은다

도·지역자활센터 간담회 현장의견 청취 김지사 “공공-민간 연계 자활사업 확대”

전남도와 지역자활센터가 도내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16일 도청에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임원진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도내 자활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철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장 등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박철수 전남지부장은 “전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매년 자활근로 사업비를 증액해 주고 타 시·도보다 먼저 시·군 자활사태관리사의 인건비를 지급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복지 현장에서 고생하는 자활 종사자와 자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자활은 저소득층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

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기조에 맞춰 공공-민간 연계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에선 1천700여명의 자활근로 참여자가 청소, 세탁, 집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2024년에는 133명이 탈수급에 성공했다.

또한 2024년 전남에선 226개 자활사업단이 89억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연 매출 1억원 이상을 달성한 사업단은 총 22개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소방 방화복 세탁사업’은 전남형 자활사업으로 2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해 ‘다회용기 렌탈·세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와 의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형 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2회 청렴페스티벌' 행사에서 부패취약 개선 방안 등 청렴 실천을 주제로 공직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부패 취약 분야 개선”…도, 공직자 1천여명 참석 ‘청렴페스티벌’

전남도는 16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 시·군,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청렴페스티벌’을 열어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청렴페스티벌은 ‘실천하는 청렴’을 주제로 토크콘서트, 청렴 교

육, 청렴 관련 퀴즈풀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 참석 공직자가 평소 애용했던 내용을 핸드폰을 통해 무대 화면에 송출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면서 소통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조직의 윤리는 개인의 청렴에서 시작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곧 조직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며 “전남도, 시·군, 유관단체 등 모든 공직자가 한데 모여 청렴을 즐기는 이 시간이 청렴 전남을 향한 큰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금타 화재 유해화학물질 투명 공개를”

최지현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주민피해 구제·환경대책 촉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철저한 후속 대처를 위해 소실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등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광산구) 의원은 16일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4천900t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타이어 제조 공정에 필요한 벤조티아질-2-사이클로헥실술펜산, 산화아연 등을 취급하고 있다”며 “이들을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이번 화재로 해당 물질이 얼마나 소실됐는지 등을 공개해 후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각재, 잔재물 또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2·3차 주민 건강 피해와 토양, 하천 오염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장마철 공장 우수관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빗물을 감안하면 오염수 유출을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화재 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준 화학사고에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금호타이어가 6월 화재 수습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현재 공주시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공장 이전, 고용 안정, 주민 피해 보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대주주 더블스타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사측은 주민 피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응이 미흡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광산구는 노약자 등 이동약자의 건강, 진료 및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적극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화재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호타이어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화학물질 소실량·잔존량을 조사해 민·관 합동 TF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화재 진압에 사용된 청소수와 오염물질은 우수로 배출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화학사고 수준의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가 보전해야”

시의회 건의안 “국비 보전 법제화 시급”

광주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건위는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천28억 원에 이른다”며 “광주의 경우 수송원가 대비 1

인당 손실액은 5천622원, 운임현실화율은 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자율적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법제화,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되는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며 “건의안 채택으로 정부와 국회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국비보전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박형대 도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 의원은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은 0%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민생지원금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자 국민 통합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는 재정 여력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민생지원금을 통해 경기 부양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MG 새마을금고

고객 한분 한분
2,300만 고객이
MG의 든든한 시작이자
우리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키운 금융
당신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